

## 【 2015.03.23(월) 강원도민일보 】

### 한윤자 강원조달청장 오늘 취임

한윤자(57·사진) 신임 강원조달청장이 2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한 청장은 “조달수요기관에 품질 높은 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며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달역량을 집중하는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횡성 출신으로 1978년 조달청 춘천사



업소에서 공직을 시작해 본청 구매국, 품질관리단, 인천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서울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

쳤다.

물품 구매와 용역계약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소탈한 성격으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박현철

## 【 2015.03.23(월) 건설경제 】

# 발주처 횡포 근절, 전방위 압박

공공 발주기관들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발주기관들의 ‘갑질’ 개선에 시동을 걸었고 공기업의 검찰로 불리는 감사원은 이번주 공공 발주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선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 발주기관, 업계, 연구기관과 함께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TF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 등 발주기관과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기재부·국토부, 불공정계약관행 개선 TF 가동

감사원도 공기업 대상 이번주 현장조사 착수

등 건설사, 대한건설협회, 국토연 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여 한다.

TF는 3개월여 기간 동안 발주기관별로 운영 중인 부당 특약 사례를 조사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 특약 개선작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기재부도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 관행개선 TF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산업통상자원부), 환경공단(환경부), 농어촌공사(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를 망라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토부보다 TF 규모가 훨씬 커질 것

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감사원도 나선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발주기관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앞서 감사원은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전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발주기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라 손실을 입은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모으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 대상 기관과 범위를 확정했다.

대상 기관에는 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 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 등 물류 공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발주기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사대금을 부당 감액하거나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 등에 감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5~6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발주기관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는 연내 받아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자료를 수집했다”며 “이번주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조사는 각 발주기관의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감사 범위와 관련된 모든 부서를 상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형·박경남기자 kth@